

# 녹지→3종 주거지역...“혁신도시 ‘부영’ 유례없는 특혜” 비난

도시계획 전문가들 “용도변경 5단계 상향 있을 수 없는 일”  
공익 확대 위한 간담회서 나주시·교육청 철저한 검증 촉구  
공공기여제도 도입 등 제시...향후 도시계획 심의 이목 집중

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6년 한전 이전지인 강남현대GBC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1단계 용도지역 상향에 1조7000억원(공공기여율 36.75%)에 이르는 공공기여 협상을 완료했으며, 광주시는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주택단지조성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24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주시는 관련 규정상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20일 “부영주택(주)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단순 특혜가 아니라 사상 유례없는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당국은 시민과 공공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주택(주)은 골프장 잔여부지 35만㎡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난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나주시에 신청했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하고 난 뒤 나머지 녹지를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이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부영주택(주)의 한전공대 인근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사상 유례 없는 특혜라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지역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특혜’라며 나주시, 나주시교육청 등 행정·교육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영주택(주)측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하고 난 뒤 나머지 녹지를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다 강한 대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나주시의 도시계획 심의, 나주시의회 의결 청취 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은 지난 17일 혁신도시열린플랫폼과 함께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공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부영골프장 주택

단지 조성사업 공익 조화 방안’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부영골프장 사례의 경우 한 번에 무려 5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추진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오늘 전두환 재판 변론 종결 관측...검찰 구형량 나올지 관심

전두환(89)씨 재판이 21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고(故) 조비오 신부의 4주기로, 담양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추모 예배 등이 진행된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7번째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탐정급 조서관 1령, 장사복 전 전두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끝으로 변론

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검찰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 일반 방청석의 경우 선착순 15석(기준 65석)만 제공하기로 하는 등 방청 규모를 축소해 일반 시민들의 재판 방청은 제한될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오염물질 초과배출 롯데케미칼 부과금 정당”

광주지법 판결...전남도 승소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롯데케미칼에 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롯데케미칼(주)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조각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초과 배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소각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고 유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롯데케미칼 측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량 측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모니아가 배출허용기준(30ppm)을 초과해 배출(355.56ppm)했다는 시험 성적서를 첨부,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4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보건환경연구원측이 발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측정유량, 이론공기량, 최대시설 용량 등 세부사항들이 미기재된 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공정시험기준의 절차를 위반한 만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료채취확인서에 미기재한 내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기재가 필요한 성격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분야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측정값 자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 측정조사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7년 기준 해당 회사 여수 1공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암모니아양이 2778kg로 등록된 점, 2018년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암모니아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측은 측정조사 과정에서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7일 404호 법정에서 A(44)씨 판결에 앞서 ‘어떻게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지’ 고민했음을 털어냈다.

A씨는 지난해 고령고 3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수학 시험과 관련, 수학동아리 학생들의 오답을 정답 처리해 추가 점수를 주는 등 학교의 공정한 학업 평가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6점짜리 서술형 한 문제(3개 항) 중 1개 항을 틀려 5점을 받은 학생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중간 답안과 풀이과정 모두 틀렸는데 정답으로 처리해 1점을 추가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이중 근호

## 성적 임의평가한 교사 고작 벌금형?

재판장 “고민 많았다”...일각선 “처벌 약해” 지적

를 풀지 못해 3점을 받은 학생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정해진 절차나 합당한 근거 없이 정답 처리해 4점을 추가로 부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따른 재량권 행사’라며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6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경우 ‘해당 학생이 체점 기준에 적힌 풀이과정 및 정답과 다른 답안을 기재해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는 이중근호를 풀어 답을 기재하는 것까지 정답으로, 정답을 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장은 “학생이 이중근호를 풀지 못한 답안을 적어넣었고 결국 정답을 쓰지 못했는데 만점에 해당하는 추가점수를 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어 “이의신청 절차도 지키지 않고 기준도 없이 형량이 어긋나는 추가점수를 부여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

다”고 했다. “임의의 지필평가 서술형 문제에 대한 추가점수를 부여해 학교측의 학습 평가에 관할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죄질이 무겁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점, A씨 행위로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정도가 경미하고 교과 학습 평가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대입 수시 모집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의 중요성과 성적 평가를 저버린 행위인 점 등을 들어 처벌 수위가 과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